

美·中·EU 기술규제 잇단 강화 韓수출기업 ‘TBT 장벽’ 최고치

산업부, 상반기 TBT 동향

통보 건수 전년比 9.3% 증가
車·전자·화학 중심 규제 확산
아시아 지역 증가폭 ‘최고’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 3개국의 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5년 1~6월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 건수는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한 2195건에 달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확대된 주요 기술규제는 ▲자동차·기계 등 안전성 규제 강화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에 집중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전체 229건을 통보해 가장 많은 규제를 내놓았다. 이는 전년(208건)보다 10.1% 증가한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기계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 제한 조치 등이 핵심으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꼽힌다.

중국은 소방 장비와 보호복 등 산업·생활안전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127건을 통보해 27.0%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기준 개정이 두드러졌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물질 적합성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53건을 통보(전년 대비 +20.5%)했다. 특히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설치, 친환경 차량 여권(e-passport) 도입 등을 예고하며 중장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 급증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세라믹, 철강 등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전체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 대비 38.3% 늘었다. 이는 전

체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는 932건(+7.4%), 북미는 262건(+6.9%)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산업별 기술규제는 식의약품(22%), 화학세라믹(20%), 농수산물(14%), 전기전자(13%), 교통안전·기계(각 6%) 등 순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규제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애로 해소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맞춰 TBT 해소와 해외 인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IAT, 온두라스 ‘그린에너지섬’ 완공

148억 투입해 태양광·ESS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략에 기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남미 지역에서 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본격화하며 한-중앙아메리카 산업협력의 물꼬를 텄다.

KIAT는 1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이슬라스데라바이아주 과나하(Guanaja)섬에서 ‘그린에너지섬 완공 및 이양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테하다(Erick Tejada) 온두라스 에너지부 장관과 정재학 KIAT 글로벌성장본부장 등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KIAT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ODA 프로젝트다. KIAT는 2021년부터 총 148억 원을 투입해 과나하섬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디젤-태양광 혼합 발전시스템과 연계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을 구축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중앙집중식 전력망이 아닌, 분산된 전력 생산과 저장장치를 활용해 지역 내 전력 자립을 가능케 하는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이다. 현지 전력망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에 최



KIAT 정재학 글로벌성장본부장(오른쪽에서 5번째)이 에릭 테하다 온두라스 에너지부 장관(오른쪽에서 4번째) 등 관계자들과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완공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KIAT

적화된 방식으로, 온두라스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5% 확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T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도모했다. 향후 온두라스 전력청은 해당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운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이자, 글로벌사우스 공략을 위한 첫 단추”라며 “새 정부의 전략에 발맞춰 중남미 지역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폭염 대응에 350억 적극 투입”

농식품부 장관, 양돈농가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농협이 특별교부세를 적극 투입해 폭염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교부세란 재난복구 등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시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심사)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재원을 말한다.

송 장관은 13일 충남 홍성 소재의 한 양돈농가를 방문해 폭염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지원책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현장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가축에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축사 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환풍기·냉방기 가동, 전기시설 점검 등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 동행한 지자체와

농협에는 현장 요청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행안부가 지난 11일 지급한 특별교부세(350억 원)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한다. 또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해 희망농가, 위험 예상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생산자단체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동서발전, CO₂ 포집 상용화 첫걸음

고순도 액화탄산가스 생산·공급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활용하는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렸다. 발전소 온실가스를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전환하는 ‘탄소 자원화’ 실증이 본격화된 셈이다.

13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울산발전본부 부지 내 설치된 천연가스 발전 CO₂ 포집설비에서 생산한 고순도 액화탄산가스를 국내 산업계에 첫 반출했다.

이 포집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4월 준공을 마쳤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동서발전을 비롯해 발전 5개사, 한국전력기술,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릉원주대, 충북대 등이 공동 참여했다.

설비는 연간 최대 3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99.9% 이상의 고순도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상용화 포집설비로, 기술적 의미가 크다.

생산된 액화탄산가스는 △조선업의 용접 공정 △반도체 세정 △드라이아이스 제조 △농업 분야의 광합성 촉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순도 탄산가스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탄소자원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할랄인증 의무화 앞두고 현장 대응 박차

K-푸드 수출업체 대상 세미나·간담회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내년 10월 시행에 들어가는 ‘할랄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대응방안 점검에 나섰다. 이는 할랄인증 의무화라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도, K-푸드가 세계 최대 무슬림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한 행보다.

홍 사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5 자카르타 K-푸드 박람회’ B2B 수출상담회 개막식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3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2026년 할랄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들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aT는 할랄인증 취득부터 현지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의무화 시행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전문가를 초빙한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세미나’가 개최돼 참가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할랄인증청은 현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할랄 인증서 발급과 해외 인증 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홍 사장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수덕 대사대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압둘 샤쿠르 국장,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이강현 회장 등 현지 주요 관계자들과 만찬 간담회도 가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지역 상생’ 앞장선다

KOSPO 세무드림 출범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소상공인의 세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KOSPO 세무드림(Dream)’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상생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13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1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대상 세무자문 프로그램인 ‘KOSPO 세무드림(Dream)’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남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여 소상공인은 세무전문가로부터 무료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제주 등 부산지방세무사회 관할 지역 사업자에게는 대면 컨설팅과 맞춤형 세무진단까지 제공된다.

박영철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